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헤드라인뉴스 공유경제 '주문형 근로자' 보호대책 수립

문화·관광 나치 잠수함 벙커, 건축적 특성 살려 문화시설로 변모

사회·복지 어린이 '삶의 힘' 키우고 사회적 안전망 확립

행재정·교육 저렴주택 공급 등 市 주요정책 중간평가 긍정적

환경·안전 쓰레기 제로 목표 '리유즈 베를린' 시범사업
지하수 모으는 '생물 공극' 홍수·가뭄 예방

도시교통 3일간 차량압류 등 음주·약물운전 처벌 강화
'비전 제로' 도입, 모든 도로 위 사고 발생 최소화

도시계획·주택 "옥외광고물 광고세 징수, 세수 늘리고 도시미관 지켜"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케이프타운	김소망	시애틀	강민규	오사카	권용수
암스테르담	장한빛	시카고	김영준	베이징	박성은
베를린	신희완	스톡홀름	문선우	상하이	문혜정
	유진경		허윤희	에드먼턴	장지훈
	홍남명	바르셀로나	진광선	토론토	고한나
뉴욕	윤규근	런던	오도영		김용훈
	이수진	버밍엄	정기성	보르도	김준광
	이정근	피렌체	김예름	파리	배세진
	정수지	자카르타	박재현	시드니	정용문
로스앤젤레스	최윤경	도쿄	박재호		
샌프란시스코	김민희		이용원		

공유경제 ‘주문형 근로자’ 보호대책 수립

새로운 노동형태 등장에 논란…실태조사 후 법적규제 확립

호주 빅토리아주 / 산업·경제

호주 빅토리아주는 공유경제의 확산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단기노동인 ‘주문형 근로’(On-demand Workforce)가 논란으로 부상하자,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면서도 신산업이 제공하는 기회요인을 살리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함. 이 결과를 바탕으로 주문형 근로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 규제를 명확하게 하고, 건전한 ‘긱 이코노미’(Gig-Economy) 생태계를 확립하고자 함

배경: ‘긱 이코노미’의 등장과 논란

- 긱 이코노미는 공유경제에서 주로 발견되는 새로운 경제·노동형태
 - 디지털 플랫폼 기반 사업체 등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독립적인 근로자와 단기계약을 맺어 사용하는 노동형태를 지칭
 - 승차공유 서비스 우버(Uber), 주거공유 서비스 에어비엔비(AirBnB) 등의 공유 경제에서 주로 발견
 - 근로자는 피고용인이 아닌 프리랜서의 지위로 회사와 계약을 하며, 정기적인 급여가 아니라 본인이 제공한 서비스와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형태
- 긱 이코노미의 확산에 따라 ‘주문형 근로’도 증가 추세
 - 긱 이코노미의 대표적 노동형태인 주문형 근로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건별로 단기적 근로관계가 형성되는 구조
 - 전통적 고용시장과는 많은 점이 다른 새로운 노동시장
 - 2017년 기준 호주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약 8%가 독립계약 근로자로 분류
 - 하지만, 주문형 근로의 규정 자체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실제 긱 이코노미체계의 주문형 근로자 수는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실정
- 긱 이코노미에 관한 상반된 입장이 대립 중
 - 긍정적인 점은 유연성과 자율성에 기반을 둔 근로관계를 제공하며, 소비자의 요구를 전달하고 충족시키기 쉬운 매력적 업무 구조를 지녔다는 점
 - 근로자는 언제 어떻게 업무를 수행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기술 발전으로 디지털 플랫폼이 소비자와 서비스 제공자를 효과적으로 연결

- 부정적인 측면은 피고용인이 일반적으로 누리는 소득과 고용의 안정, 재해보상, 유급휴가, 기업연금 등의 혜택이 전혀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
 - 회사는 최저임금을 지급할 책무가 없으며, 실제로 호주 온라인 배달업체 딜리버루(Deliveroo)의 배달원 4명 중 3명은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을 버는 것으로 확인
 - 근로자에게 집단 협상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서비스 건당 수수료율 등을 회사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기 쉬운 상황
- 고용형태 논란으로 각 이코노미에 대중의 관심이 증폭
 - 온라인 배달업체 푸도라(Foodora)가 사기성 근로계약으로 퇴출되는 사건 발생
 - 피고용인을 독립하청 계약으로 고용해 노동법상의 근로자보호 의무를 회피하고 저임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되어 시장에서 퇴출
 - 회사와 근로자가 사실상의 고용관계에 있었는지, 독립계약인지가 주요 쟁점
 - 판결에는 각 이코노미의 근로계약이 노동법상의 근로자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는 정부의 입장이 반영
 - 이 사건으로 각 이코노미와 주문형 근로에 대중의 이목이 집중
 - 하지만, 연방정부의 법·제도도 미정립 상태여서 주문형 근로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상황
 - 근로자의 장비나 유니폼 지급, 기업연금 가입, 세금 등의 관련 세부 규정도 포함

주요 내용

- ‘주문형 근로 실태조사’ 시행해 근로자의 법적 지위 확립
 - 일차적으로 주문형 근로의 이해도를 높이고, 최종적으로 주문형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할 목적
 - 주문형 근로자에게 재해보상, 기업연금, 산업안전 등의 근로자 보호법을 적용·집행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근로자 보호 외에도 각 이코노미의 기회요인과 위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현행 법규가 주문형 근로에 종사하는 노동시장 취약계층(저연령자, 저학력자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
 - 각 이코노미가 소비자와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도로안전 등)
 - 근로자를 위한 보험 보장 의무와 주정부 세수에 미치는 영향
 - 각 이코노미가 다른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다른 지자체의 주문형 근로자 보호 대책
 -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법에 따른 근로자 보호 체계
 - 새로운 고용 관계 정립에 요구되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역할과 협력 관계

- 실태조사에 앞서 ‘배경 보고서’를 발간해 이해당사자에게 관련 배경지식을 전달
 - 의견수렴 과정과 결과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주문형 근로와 관련된 주요 이슈에 관한 설명을 실태조사 참여자에게 제공
- 실태조사 참여자의 입장에 따라 질문내용을 다르게 설계
 - 주문형 근로자, 소비자·지역사회, 업체가 각각의 경험과 입장이 반영된 다양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설문지를 제작

[표 1] 주문형 근로 실태조사 참여자별 설문 내용

구분	주요 설문 내용
주문형 근로자	- 급여 수준, 근로 빈도 - 주문형 근로 활동 계기 - 전통적 근로관계와 주문형 근로관계의 차이 - 회사가 계약 근로를 노동법 의무를 피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견해 - 근로를 위한 훈련이나 직무 교육 여부 - 업무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대처 방법 - 기업연금 제공 여부
소비자·지역사회	- 주문형 경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 - 주문형 경제 서비스의 이점 - 불량 서비스를 받았을 경우 대처 방법 - 주문형 근로자와 회사가 노동법 혹은 소비자 보호법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관심 - 주문형 경제 서비스가 소비자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위험 요인
업체	- 전통적 경제와 주문형 경제의 차이점 - 주문형 경제 서비스의 지역별 편차(도심, 외곽) - 주문형 경제 업체의 이점 및 어려운 점 - 주문형 근로자 관리체계(급여, 혜택, 규정 등) - 근로자와 협상하는 방법 - 하청 계약 근로자가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른 걱정이나 문제들

- 실태조사 후 피드백을 거쳐 다양한 관련 분야에 정식 정책제언 예정
 - 주정부는 2019년 후반까지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

<https://www.premier.vic.gov.au/have-your-say-about-the-gig-economy-in-victoria>

https://djpr.vic.gov.au/what-we-do/industrial-relations/inquiry-into-the-victorian-on-demand-workforce#utm_source=economicdevelopment-vic-gov-au&utm_medium=vanity-url-301ssredirect&utm_content=on-demand-inquiry&utm_campaign=what-we-do

https://djpr.vic.gov.au/_data/assets/pdf_file/0011/1751258/11895-E4729-DEDJTR-IRV-On-Demand-Inquiry-Report_V6_WEB.pdf

정용문 통신원, junraphael@gmail.com

나치 잠수함 벙커, 건축적 특성 살려 문화시설로 변모

프랑스 보르도市 / 문화·관광

프랑스 보르도市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군이 건설한 대규모 잠수함 벙커의 활용 방안을 두고 논의한 결과, 이례적으로 거대한 지하공간과 두꺼운 기둥 등의 건축적 특성이 공연·전시 등의 활동과 어울릴 것으로 판단하고 문화시설로 활용할 계획을 세움. 현재 일부 공간만 정비해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모든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예정

배경: ‘라 바즈 수-마린느’(La Base Sous-Marine)

-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군이 보르도 북쪽에 건설한 대규모 잠수함 벙커
 - 큰 공간에 두꺼운 콘크리트를 겹겹이 쌓아 철거는 생각하기도 어려운 규모
 - 가로 245m 세로 162m 높이 20m의 공간에 두께 3.5m의 콘크리트 지붕을 얹고 그 위에 다시 2.1m 두께의 덧지붕을 덮은 것도 모자라, 폭격에 대비해 개당 32톤의 콘크리트 보를 5미터 간격의 격자형으로 지붕 위에 얹은 건조물
 - 현재까지 프랑스 전역에 이와 같은 형식의 잠수함 벙커가 총 5개 남아있음
 - 수천 명의 전쟁포로를 동원해 2년 만에 완성
 - 주로 스페인 포로가 동원되어 건설기간인 2년간 7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약 60만㎡의 콘크리트를 사용했다고 기록
 - 보르도의 것은 유지상태가 좋은 편으로 현재 문화공간으로 활용되는 곳은 보르도를 포함한 2곳뿐

주요 내용

- 이 건조물의 활용가능성에 주목한 보르도시는 2014년 논의 끝에 개방을 결정
 - 약 42,000㎡의 넓은 실내면적, 두터운 벽과 지붕의 강한 지속성, 높은 천정이 주는 방대한 공간감 등을 고려했을 때 공연·전시 등 다양한 문화활동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



[그림 1] '라 바즈 수-마린느' 내부의 실제 문화활동 모습

- 2015년 “이미지-잠수함 격납고-지붕”이라는 주제로 보르도시장이 주재하는 아틀리에 개최
 - 이 아틀리에에서 해당 건조물을 점진적·단계적으로 개발해 문화공간으로 개조 후 시민에게 개방하기로 결정
- 둔탁하고 거친 전쟁을 위해 만들어진 콘크리트 덩어리에 예술과 문화의 옷을 입힌다는 취지
 - 리모델링이나 대규모 내부공사를 거치지 않고 건조물 자체는 그대로 두되, 조명·위생시설·난간 등 최소한의 편의·안전시설 정도만 손보는 개입
 - 실제 방문을 해보면 벽면에 폭발에 따른 파괴 흔적, 곳곳에 거미줄과 녹슨 철 구조물 등이 그대로 남아있어 입장과 동시에 여타의 박물관에서 느낄 수 없는 남다른 긴장감을 방문객에게 선사

- 현재 전체 면적 약 42,000㎡ 중 12,000㎡ 정도만이 대중에 공개되어 때마다 다른 전시나 공연을 선보임
 - 입장료는 5유로(6,500원) 정도로 저렴한 수준
 - 앞으로 모든 구역을 개방하고, 입장료도 15유로(19,500원) 이내로 맞출 예정
- 2017년 건조물 일주공간 활용방안 프로젝트를 공모했으며, 현재 당선자와 협의 중
- 오는 2020년까지 “빛의 저수조”(잠수함 격납고를 비유한 제목)라는 주제로 빛과 음향을 바탕으로 꾸민 하이테크놀로지 전시공간으로 변모할 예정

시사점

- 적은 예산과 최소한의 개입으로 공간의 특성을 잘 살린 유휴공간 활용 사례
 - 버려진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데에 반드시 대단위 예산이 필요한 것만은 아니며 최소한의 개입으로도 충분히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음
 - 오히려 공간이 가진 역사적 특성을 그대로 살려둬으로써 방문자에게 독특한 경험을 선사하는 이점이 있음

https://actu.fr/nouvelle-aquitaine/bordeaux_33063/la-base-sous-marine-bordeaux-va-se-transformer-bassin-lumieres_18065661.html

http://www.bordeaux.fr/ebx/pgFicheOrga.psm1?_nfpb=true&_pageLabel=pgFicheOrga&classofcontent=organisme&id=271

<http://www.bordeaux.fr/p108318/reflexion-sur-la-rehabilitation-de-la-base-sous-marine>

<https://www.lemoniteur.fr/photo/a-bordeaux-lumieres-sur-la-base-sous-marine.1983839/base-sous-marine-de-bo.4#galerie-anchor>

https://fr.wikipedia.org/wiki/Base_sous-marine_de_Bordeaux

김 준 광 통신원, junkwang.kim@gmail.com

어린이 ‘삶의 힘’ 키우고 사회적 안전망 확립

일본 오사카시 / 사회·복지

일본 오사카시는 앞으로 지역사회를 이끌어 나갈 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이 안전한 사회 속에서 자신감 있는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어린이·육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 중임. 어린이와 청소년의 ‘삶의 힘’(生きる力)을 키워 의지를 심어주고 자립을 돕는 한편으로, 부모가 오사카에서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확립하고 지원체계 등을 구축

개요

- 차세대 육성을 돕는 어린이·육아 지원 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
 - 앞으로 오사카를 담당할 모든 어린이·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고 자립을 돕는 것이 목표
 - ‘어린이·육아 지원법’에 근거한 지원사업과 ‘차세대 육성지원대책 추진법’에 따른 차세대 육성지원 행동계획을 통합해 ‘오사카시 어린이·육아 지원계획’을 수립
 - 계획기간은 2015~2020년
 - 모든 어린이·청소년과 육아 가정을 대상으로 시행
 - 이 계획에서 지원하는 대상의 범위를 0~30세로 상정

주요 내용

- 4가지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 실행계획을 제시
 - 어린이·청소년의 ‘삶의 힘’ 육성,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지원체계 확립, 어린이·청소년과 육아가정의 안전망 확립, 어린이·청소년과 육아가정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마을 만들기
- 어린이·청소년의 ‘삶의 힘’ 육성
 - 오사카시의 어린이·청소년은 자기긍정감이 낮은 편이고, 장래 희망이나 목표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은 경향
 - 어린이·청소년이 의욕을 갖고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
 - 어린이의 건전한 생활습관 형성,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인식 확립, 사회규칙과 매너 준수, 지역에 애착을 갖고 공헌하려는 마음가짐 함양

- 청소년 등 젊은층이 의욕을 가지고 취업하고 개성과 재능을 살리면서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지원체계 확립
 - 핵가족화와 세대 규모 축소에 따른 가정과 지역의 연결성 약화, 육아의 경제적 부담 증가, 일과 육아의 병행 어려움 등의 요인으로 저출산이 심화
 - 보호자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환경과 사회체제를 정비
 - 임신부·영유아·보호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일을 하면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직장생활 방식 선택이 가능한 사회체제 구축
- 어린이·청소년과 육아가정의 안전망 확립
 -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등 어린이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사회문제가 심각
 - 아동학대 등의 이유로 가정에서 적절한 양육을 받기 어려운 어린이가 증가하고, 이지메·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소년범죄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다수 발생
 - 어린이·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에서 이들을 보호하고, 어려움에 직면한 어린이·청소년을 도와 자립으로 이끌 수 있는 사회체제 실현이 목표
- 어린이·청소년과 육아가정이 안전·안심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마을 만들기
 - 최근 육아가정에 시간적 여유와 육아하기 쉬운 주거공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형성되었지만, 오사카시는 교통사고·범죄 등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많다는 우려
 - 어린이·청소년이 오사카에서 자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보호자가 오사카에서 아이 양육에 만족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
 - 다양한 위기상황에서 어린이·청소년과 육아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사회체계를 점검·보완
 - 어린이·청소년이 위기상황에서 자신을 지키는 힘을 갖도록 돕고, 서로 협력하는 인식이 지역사회에 자리를 잡도록 노력

<http://www.city.osaka.lg.jp/kodomo/page/0000304496.html>

권 용 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

저렴주택 공급 등 市 주요정책 중간평가 긍정적

스페인 바르셀로나市 / 행재정·교육

스페인 바르셀로나市는 스페인 지자체 중 유일하게 주기적으로 정책평가를 시행해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있으며, 최근 조사에서 시정부의 주요정책인 신규주택의 30%를 저렴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과 2개로 나누어진 트램 노선을 연결하는 사업에 많은 시민이 지지하는 것으로 확인

개요

- 바르셀로나 시정부는 반년 주기로 정책평가를 시행해 정책에 반영
 -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시행하는 정기 정책평가이며, 고정질문과 가변질문으로 구성
 - 다음 지방선거의 투표의향 등 정치적인 질문까지 포함한 설문조사
 - 전반적인 도시 정책과 현 상황에 관한 만족도는 고정적으로 조사
 - 지자체 지도자와 시의회 평가, 서민경제와 도시의 일반적 문제 등
 - 같은 항목을 오랫동안 조사해 축적한 자료는 유의미한 통계 지표
 - 가변적 질문은 현재 이슈가 되는 상황이나 중점 추진 정책 등을 평가
 - 시민 800명 대상 전화설문 방식이며, 이번 평가는 작년 11월 27일~12월 6일 시행

주요 내용

- 과반의 시민이 현재 바르셀로나 시정부를 긍정적으로 평가
 - 평가 참여자의 63%가 바르셀로나 시정부에 긍정적 평가를 내린 것으로 조사
 - 반면, 스페인 주정부와 카탈루냐 자치정부의 행정상황이 악화되었다는 평가는 각각 67%와 66%
 - 참여자의 46%는 현재의 시 경제 상태가 ‘훌륭함’ 또는 ‘매우 훌륭함’으로 평가
 - 미래에 시의 경제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예상도 절반을 웃도는 53% 수준
- 시정부의 중점 추진 정책인 저렴주택 공급과 트램 노선 연결 사업에 많은 지지
 - 신축이나 대규모 재건축으로 만들어지는 신규주택의 30%를 저렴주택으로 공급하는 정책에 평가 참여자의 85%가 찬성
 - 현재 2개로 나누어진 트램 노선을 연결하는 정책은 63%가 찬성하고 있으며, 반대는 20%

- 실현되면 교통난 해소에 많은 이바지를 할 것으로 기대
- 주요 문제로는 스페인과 카탈루냐 사이의 정세 불안과 주택 마련의 어려움 등
 - 스페인-카탈루냐 사이에 조성된 불안감은 지난 2년간 주요 문제로 지적
 - 정세 불안을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참여자는 21%지만, 이전 조사의 최고치에서 7.3% 떨어진 수준
 - 주택 마련의 어려움은 2분기 연속 도시의 주요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응답비율은 12%
 - 이러한 문제의식이 신규주택의 30%를 저렴한주택으로 공급하는 정책을 향한 높은 지지로 나타났다는 분석



[그림 1] 바르셀로나 신규주택 건설 모습



[그림 2] 트램 앞에 선 바르셀로나시장과 관계자들

<http://ajuntament.barcelona.cat/dretssocials/es/noticia/la-mayorza-a-favor-del-30a-de-vivienda-asequible-y-de-conectar-el-tranvza-por-la-diagonal>

https://www.barcelona.cat/infobarcelona/es/acuerdo-entre-entidades-y-grupos-politicos-para-que-el-30-de-las-nuevas-viviendas-sean-protegidas-2-2_744446.html

<http://ajuntament.barcelona.cat/dretssocials/es/noticia/consenso-entre-los-municipios-metropolitanos-para-conectar-el-tranvza-por-la-diagonal>

진 광 선 통신원, sunnynice@hanmail.net

쓰레기 제로 목표 ‘리유즈 베를린’ 시범사업

독일 베를린시 / 환경·안전

독일 베를린시 환경·교통·기후 보호 상원부는 베를린을 ‘쓰레기 제로’(Zero-Waste) 도시로 도약시키고자 재활용 이니셔티브인 ‘리유즈 베를린’을 계획했으며,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 파일럿 프로젝트로 중고물품 팝업스토어와 재활용 아이디어 대회를 개최

배경

- 연간 15만 톤의 가정 폐기물 발생, 많은 부분이 재활용 가능
 - 2016년 한 해 동안 베를린의 가정 폐기물은 전기·전자 기구를 포함하여 약 15만 톤에 이르지만, 폐기물의 많은 부분이 재활용할 수 있는 상태
- 환경친화적 도시사회로 전환을 추구하는 ‘리유즈 베를린’ 이니셔티브 추진
 - 생산-사용-폐기라는 기존 소비원칙을 넘어, 자원을 아끼고 폐기물 양을 줄여 환경친화적으로 도시사회를 바꿀 필요성 대두
 - 베를린을 ‘쓰레기 제로’ 도시로 도약시킬 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 “‘리유즈 베를린’ 이니셔티브는 윈윈(Win-Win) 상황을 이끌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중고 물품을 사고, 더불어 환경과 기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사회와 생태는 서로 연결됩니다.”
 - 레기나 귄터(Regina Günter), 베를린 환경·교통·기후보호 상원의원

내용 1: 중고품 팝업스토어

-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모아 팝업스토어 개장
 - 시정부와 기업, 시민의 협력으로 가정에 쓰지 않는 물품을 모아 중고품 팝업스토어를 개장
- 화물 자전거, 시립 청소기관, 7일장을 이용해 중고물품을 수집
 - 화물 자전거 3대가 11월 8~10일 노이켈른 북부지역 중고물품 수집을 담당
 - 인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부피가 큰 폐기물은 제외하고, 잘 보관된 가정용품·식기류·소형 전자제품·서적·CD/DVD·의류·장난감 등을 수집

- 베를린 시립 청소기관과 7일장에 시민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증정
 - 베를린 시립 청소기관인 BSR(Die Berliner Stadtreinigung)의 센터나, 콜로 비츠플라츠(Kollowitzplatz)의 에코마켓, 아카찌엔길(Akazienstraße)의 에코마켓에 시민이 직접 쓰지 않는 물품을 가져올 수 있음
 - 초기에 모인 중고물품은 총 60㎡가량
- 11월 30일부터 12월 16일까지 주말을 이용해 팝업스토어 개최
 - 몇 달간 모은 물품을 일정 기준에 따라 잘 정리하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거나 시민이 가져온 물품과 교환
 - 노이쾰른 지역의 CRCLR 하우스에서 개최
 - 수익금은 전부 ‘리유즈 베를린’에 기부해 재활용 아이디어 대회 상금으로 사용
 - 중고물품 판매뿐 아니라 강의·워크숍·토론 등의 행사도 무료로 진행
 - 재사용과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한 전문가 강연이나, 마이크로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천연화장품 만들기 워크숍 등

내용 2: 재활용 아이디어 대회

- ‘리유즈 베를린’ 파일럿 프로그램의 하나로 12월 14일 개최
 - 물품을 재활용하거나, 자재의 사용주기를 늘리거나, 낭비를 피하는 방법 등에 관한 시민 아이디어 경연대회
- 80명 참여, 7개 수상작에 상금 1,000~2,500유로(128만~320만 원) 수여
 - 9명의 배심원이 심사한 결과에 따라 3개 아이디어에 본상, 4개의 아이디어에 특별상을 시상
- 1등: 엘리자베스 프란트너(Elizabeth Prantner) “이것이 나에게서 해질 때까지”
 - 패션·섬유 부문의 창조적이고 지속적인 접근 방식으로, 오늘날 패스트 패션에 대한 반성과 옷의 재사용을 촉구
- 2등: 나탈리 스위즈(Nathalie Swords) “순환 경제 하우스”
 - 베를린 노이쾰른 지역에 있는 건물로, 건물 철거 당시 발생한 원자재를 사용하여 건축물을 재건
- 3등: 반 보 레 멘첼(Van Bo-Le Mentzel) “재사용 가구”
 - 쓰지 않는 중고가구를 이웃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트레일러와 함께 놓아 필요한 이웃이 가져가서 쓸 수 있도록 함
 - 2019년 파일럿 프로그램 실행 예정

향후 계획과 의의

- 아이디어 대회 수상 내용과 상설 중고판매 가게 등 설치 계획
 - 2019년에는 팝업스토어를 넘어 중고 제품을 상시로 판매하는 ‘미래의 백화점’을 설치할 예정
 - 더불어 파손된 물품을 수리할 수 있는 관리 시설도 마련할 계획
 - 그 외에도 아이디어 대회에서 수상한 내용을 실제로 적용할 예정
 - 이미 베를린에는 많은 벼룩시장이 있지만, 시정부가 앞장서서 시민이 처분하지 못하는 물건을 모으고 관리하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큼



[그림 1] 리유즈 베를린 중고물품 수집 바이크



[그림 2] 재활용 아이디어 대회 시상식

<https://www.berlin.de/senuvk/umwelt/abfall/re-use/index.shtml>

<https://www.berlin.de/sen/uvk/presse/pressemitteilungen/2018/pressemitteilung.766875.php>

<https://www.morgenpost.de/berlin/article215328613/Initiative-fuer-Gebrauchtwaren-soll-Abfallmenge-verringern.html>

https://www.berlin.de/senuvk/umwelt/abfall/re-use/download/re-use_flyer.pdf

<https://www.morgenpost.de/bezirke/neukoelln/article215779483/Ein-zweites-Leben-fuer-das-Keybord.html>

<https://berlin-ick-liebe-dir.de/re-use-berlin-pop-up-store>

홍 남 명 통신원, dangmu7722@gmail.com

지하수 모으는 ‘생물 공극’ 홍수·가뭄 예방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주 / 환경·안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주는 도시민 대다수가 지하수를 식수원으로 추출하고 있어 지반침하와 그에 따른 가뭄·홍수 발생이 악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도시 곳곳에 생물 공극(Biopore)을 조성해 빗물과 지표수의 흡수를 도모하는 근본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시민에게 적극 권장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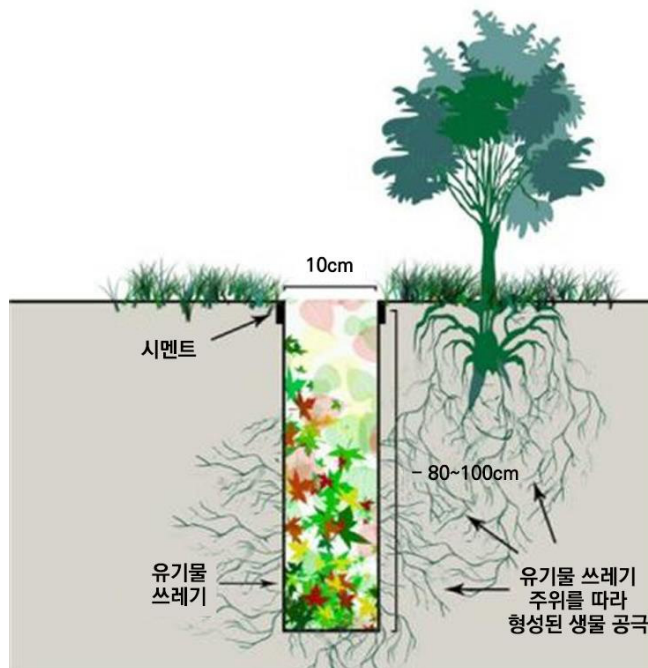
배경: 지하수 고갈이 초래하는 다양한 환경·안전 문제

- 자카르타 거주민의 60%는 지하수를 주요 식수원으로 이용
 - 지하수 소비량은 도시 전체의 연 물 소비량 10억 톤의 약 2/3인 6억 3,000만 톤
 - 수도관을 이용한 물 공급은 주로 상업지구와 부유층 거주지구로 한정
- 지하수 추출량에 비해 지하로 흡수되는 빗물·지표수의 양은 크게 부족
 - 시멘트 및 콘크리트 포장 때문에 빗물의 불과 15%만이 지표면 아래로 흡수되며 나머지는 하천으로 유입되는 상태
- 전기에는 상시적 가뭄 상태이며, 지하수 고갈로 매년 평균 11cm씩 지반 침하 중
 - 현재의 지반 침하 추세가 지속된다면, 2050년까지 자카르타 전체의 약 95%가 해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전망
 - 이미 자카르타 전체의 40%가 해수면보다 낮은 곳에 위치
-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지반 침하 대책은 하천유역 정비, 해안가 보강, 인공 섬 조성과 같은 거대한 인프라 사업 위주로 한정
 - 1995년부터 자카르타 북쪽의 만에 수도권통합해안개발(NCICD) 마스터플랜 또는 자이언트 씨 월(Giant Sea Wall) 사업이 진행 중
 - 이마저도 아니스 바스웨단 주지사가 2018년 9월 추가 매립 증지를 명령한 이후로 표류·지연되고 있는 상태

주요 내용

- 생물 공극은 국립 보고르 농업대학교 토양과학·토지자원학과 교수진이 창안
 - 환경보호를 위해 정부와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주정부 인프라 공공시설 사업에 가해지는 부담과 의존성을 줄이려는 것이 창안 배경

- 각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르면 생물 공극을 손쉽게 조성
 - 뒤뜰 등 적당한 장소를 찾아 드릴 등으로 지면에 지름 10~25cm, 깊이 1m의 구멍을 천공하고, 구멍과 같은 크기의 PVC 강관을 삽입
 - 강관 내에 식물의 줄기나 잎 등 유기물을 집어넣고 침수구에 덮개를 씌운 후 시멘트·모래 등으로 강관 주변을 움직이지 않게 보강
 - 생물 공극 내 유기물의 분해주기인 2~3개월마다 내부 유기물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고 분해된 유기물은 퇴비로 활용
 - 생물 공극의 침수구(Infiltration Hole)는 지면에 수직 방향으로 만들어진 실린더 모양의 구멍으로, 우천 시 빗물의 지표면 침수를 원활하게 할 것으로 기대



[그림 1] 생물 공극 단면도

- 주정부 산하 각 지자체도 생물 공극 조성에 적극 동참 개시
 - 남 자카르타시는 약 100만 개의 생물 공극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시민의 동참을 적극 홍보
 - 동 자카르타시는 2018년 12월 커뮤니티마다 생물 공극을 조성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구청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지시

- 생물 공극 조성 외에도 각 커뮤니티 내 빈 땅을 도시농업을 위해 가꾸고 생물 공극에서 나오는 분해 유기물을 퇴비로 활용할 것을 권고
- 기후환경 단체들도 생물 공극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옹호
 - 아시아 도시 기후변화 회복탄력성 네트워크(ACCCRN), 국제 NGO ‘Mercy Corps’의 인도네시아 지부 등도 생물 공극을 이용한 해결책을 적극 옹호

<https://smartcity.jakarta.go.id/blog/436/biopore-a-solution-to-prevent-flood-and-drought>

<https://en.tempo.co/read/news/2018/12/04/057923957/Study-North-Jakarta-Ground-Constantly-Sinking-11cm-Annually>

<https://www.bbc.com/news/world-asia-44636934>

<https://megapolitan.kompas.com/read/2018/12/17/12524161/perjalanan-panjang-reklamasi-teluk-jakarta-dari-soeharto-hingga-anies>

<https://theconversation.com/why-the-rich-in-jakarta-have-better-access-to-water-than-the-poor-its-not-the-piped-network-91658>

<https://www.antaranews.com/berita/767637/wali-kota-imbau-warga-jakarta-utara-buat-biopori-hadapi-banjir>

<https://jakarta.tribunnews.com/2018/12/17/wali-kota-jakarta-timur-imbau-rtrw-membuat-lubang-resapan-biopori#gref>

<https://waste4change.com/biopore-infiltration-holes-prevent-flooding-and-produce-compost/2/>

박재현 통신원, jaehyeon.jay.park@gmail.com

3일간 차량압류 등 음주·약물운전 처벌 강화

캐나다 앨버타주 / 도시교통

캐나다 앨버타주는 음주·약물운전 피해가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지난 2017년 대마초 합법화가 이루어지자, 의무적 알코올 테스트 도입 등 음주·약물운전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단속에 적발되는 즉시 90일간 면허를 정지하고 3일간 차량을 압류하는 등 전체적으로 처벌 강도를 높임

배경

- 음주·약물운전 관련 사고가 지속 발생
 - 2014년 교통사고 사망자 중 19.1%는 알코올·마약 양성 반응 운전자가 유발한 사고에서 발생
 - 2012~2016년 음주 관련 사고로 368명이 사망하고 5,494명이 부상
 - 음주·약물운전 단속이 최초로 실행된 지난 12월 1일에 전국적으로 11,895대의 차량을 검사해 음주운전 23건, 약물운전 2건이 적발
- 혈중알코올농도가 범정한도를 초과한 운전자 중 절반이 적발되지 않고 통과된다는 연구 결과
 - 운전자에게 구두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기존 단속 방법은 단속 구간과 시간이 짧아서 실제 음주 징후를 파악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진단

주요 내용

- 대마초 합법화 이후 음주·약물운전 처벌 규정 강화
 - 앨버타 주정부는 2017년 대마초 합법화 이후 후속 조치로 음주·약물운전 위반과 제재 기준을 강화해 2018년 6월 21일부터 개정·발효
 - 정지신호를 위반하거나 과속한 운전자에게도 음주·약물 검사를 시행할 예정
 - 대다수 앨버타 주민은 음주·약물운전의 증가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강화된 법안을 지지
 - 캐나다 물질중독 및 중독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대마초 사용은 충돌 위험을 평균 2배가량 증가시킴
- 약물운전의 처벌 기준은 기존의 음주운전과 같은 수준으로 책정
 - 대마초 등에서 발견되는 주요 정신변화성분의 혈중농도(BDC)를 측정

- 기존 음주운전 유죄판결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와 유사한 수준

[표 1] 앨버타주 약물운전 처벌 규정

혈중 마약성분 농도(BDC)	제재 사항	
2ng/ml 이상 5ng/ml 미만	최대 1,000캐나다달러(85만 원)의 벌금	
5ng/ml 이상 (연방법에 따른 추가 제재 있음)	1차 위반	최소 1,000캐나다달러의 벌금
	2차 위반	구속 30일
	3차 또는 연속 위반	구속 120일
BDC 2.5ng/ml 이상이면서 혈중알코올농도 50mg/100ml 이상	1차 위반	최소 1,000캐나다달러의 벌금
	2차 위반	구속 30일
	3차 또는 연속 위반	구속 120일

- 음주·약물 측정을 거부하거나 단속에 적발된 모든 운전자에게 강한 제재
 - 해당 운전자는 즉시 90일간 면허가 정지되고, 3일간 차량을 압류
 - 2회 이상 적발될 때부터는 차량압류 기간이 7일로 증가
 - 음주운전 시동잠금 프로그램(Ignition Interlock Program)에 1년 의무 참여
 - 2018년 4월 9일부터 도입된 프로그램으로, 음주측정기와 차량 시동장치를 연동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시동이 걸리지 않음
 - 위반자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유지
- 교육면허(GDL: Graduated Driving License) 소지자는 별도의 기준으로 처벌
 - GDL면허는 정식면허 전에 발급되는 일종의 교육면허로, 발급 1년 뒤에 정식면허로 승급이 가능
 - GDL면허 소지자가 음주·약물운전 적발 시 즉시 면허정지 30일과 7일간의 차량 압류 조치가 시행되며, GDL면허 기간이 2년 연장

찬반 여론

- 음주운전 반대 어머니회(MADD)는 의무적 알코올 테스트 도입을 적극 환영
 - 의무적 알코올 테스트는 아일랜드·뉴질랜드·호주 등에서 시행 중임을 강조
- 반대의견으로는 경찰의 단속권한 남용과 인권침해 우려를 표시
 - 경찰이 의도적으로 인종차별적 단속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줄 것이라는 우려
 - 운전자의 피부색이나 남루한 행색 등을 보고 알코올 테스트를 하면서 뒷좌석을 탐색하는 등 음주운전 단속 외의 공무를 할 가능성 제기

- 2차 검사 실행의 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제기
 - 경찰관은 입김으로 확인하는 1차 검사 결과에 따라 체액 샘플을 채취하는 2차 검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이 기준이 임의적일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
 - 2차 검사는 알코올과 마약 모두 검출이 가능하지만, 시행 여부가 경찰관의 재량에 달렸다는 점에서 우려
- 일부 시민단체는 위와 같은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힘
 - 캐나다 시민 자유연맹(Canadian Civil Liberties Association)은 강제 알코올 테스트가 소수민족에게 불공평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
 - 록키마운틴 시민 자유연맹(Rocky Mountain Civil Liberties Association)은 테스트에 응하지 않기를 홍보하고 있음



[그림 1] 앨버타주의 주도인 에드먼턴 경찰의 음주측정장치 시연 장면

<https://www.transportation.alberta.ca/4958.htm>

<http://www.transportation.alberta.ca/1852.htm>

<https://edmontonjournal.com/news/local-news/new-drunk-driving-test-allows-police-to-administer-breath-alyzers-without-reasonable-suspicion>

<https://www.ctvnews.ca/politics/mandatory-drunk-driving-tests-hitting-the-roads-before-the-holidays-1.4203905>

장 지 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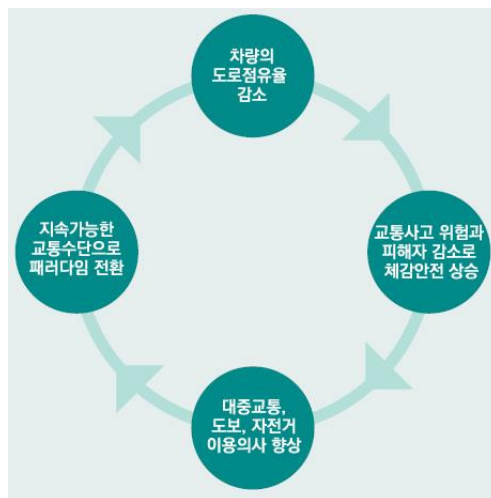
‘비전 제로’ 도입, 모든 도로 위 사고 발생 최소화

영국 런던시 / 도시교통

영국 런던시는 장기적으로 시내 이동수단의 80%가 대중교통·도보·자전거 등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이 되는 미래를 지향하는 교통전략을 수립·시행 중임. 시정부는 이 전략의 선결과제로 모든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최소화를 설정하고 ‘비전 제로’ 교통안전 프로그램을 실행

개요

- 장기적으로 시내 이동수단의 80%를 대중교통·도보·자전거 등으로 채울 계획
 - 런던 장기 교통전략에서 밝힌 주요목표 중 하나로, 2041년까지 런던 내 이동형태의 80%를 대중교통과 도보·자전거 등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 구성할 계획
- 도로상의 사고를 최소화해 안전을 확보해야 대중교통·도보·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 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도로 위에서 안전 보장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전 제로’ 프로그램을 도입
 - 비전 제로 프로그램은 사망·중상 교통사고 제로를 지향하는 교통안전 프로그램으로, 1997년 스웨덴에서 시작해 캐나다·네덜란드·미국 주요도시 등에서 시행 중
 - 도로상의 안전 보장으로 차량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등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의 활성화를 돕는 선순환 구조 확립을 추구



[그림 1] 런던 비전 제로 선순환 프로세스 개념

주요 내용

- 2041년을 목표로 단계별 장기계획과 구체적 목표를 설정
 - 2022년까지 2005~2009년 대비 사망사고 건수 65%, 버스 관련 부상·사망 사고 70% 감소
 - 2030년까지 2010~2014년 대비 사망·중상 사고 건수 70% 감소하고, 버스사고로 발생하는 버스 내외부 사망자 0명을 달성
 - 2041년까지 런던의 모든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사망·중상 사고를 0으로 만들 것
 - 런던교통공사, 각 자치구 등 교통안전 관련 주체들과 함께 수행
- 5가지 주요 실천계획을 세워 비전 제로 목표 달성을 추진
 - 런던교통공사 운영 교통망 내 제한속도 하향 조정
 - 2020년까지 런던 내 모든 교통혼잡세 부과구역(Congestion Charging Zone) 도로의 제한속도를 20mph(32.2km/h)로 새로 설정
 - 안전상 위험한 교차로 개선
 - 조사결과 안전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확인된 시내 73개 교차로를 대상으로 대대적 보수공사를 벌여 시민안전을 확보할 계획
 - 대형 화물차 설계·제조 시 더 강력한 안전기준 적용
 - 대형 화물차 등을 지칭하는 HGV(Heavy Goods Vehicles) 디자인 설계와 제조 과정에 도로안전성 관련 기준을 더 강하게 적용
 - 세계 최고 수준의 버스 안전기준 확립
 - 런던 2층 버스의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내·외부적 조치를 시행
 - 2018년부터 생산되는 모든 버스에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첨단 안전기술을 도입
 -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로 구축
 - 런던 내 모든 도보를 걷기에 안전하고 자전거를 타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하는 사업에 2041년까지 22억 파운드(3조 원)를 투입할 계획
- 무엇보다 도로 위 위험 감소에 가장 큰 중요성 부여
 - 런던의 도로가 지하철·철도보다 위험발생 요인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에 근거

<https://www.london.gov.uk/what-we-do/transport/improving-londons-roads/vision-zero-london>

<https://www.london.gov.uk/what-we-do/transport/cycling-and-walking/making-walking-count>

정기성 통신원, jkseong71147@gmail.com

“옥외광고물 광고세 징수, 세수 늘리고 도시미관 지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주 / 도시계획·주택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주는 도시미관 보호와 주정부 세수 창출을 목적으로 옥외광고물의 설치·관리를 규제하는 주지사 행정령을 시행 중임. 광고 임대료의 25%를 광고세로 징수해 시의 재정에 이바지하는 한편, 시민보건을 위해 담배광고는 전면금지하고 주류광고는 설치 장소를 제한하고 세금을 더 받는 등 윤리적 측면의 규제도 함께 시행 중

주요 내용

- 도시미관, 윤리, 건축물·환경과 조화 등의 문제를 고려한 옥외광고물 규제 시행
 - 옥외광고물 설치지침은 2014년에, 운영관리 지침은 2017년에 주지사 행정령으로 제정해 옥외광고물을 규제 중
- 옥외광고물의 유형에 따라 임대료를 받고, 임대료의 25%를 광고세로 징수
 - 옥외광고물의 설치 위치와 기간, 개수, 크기 등을 고려해 광고 임대료를 책정
 - 특정 상품을 광고하는 ‘상품광고’와 기업·기관 등을 홍보하는 ‘비상품광고’를 구분해 적용
 - 광고세는 임대료의 25%이며, 주류광고는 25%를 가산
 - 디지털화면 옥외광고물에 주정부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정보제공성 광고는 광고세 70% 감면

[표 1] 광고 임대료 책정 시 고려요소

항목	주요 고려요소
광고 유형	상품/비상품 광고
위치	중심지 I/II/III, 환경
도로 유형	간선도로 A/B/C
옥외광고물 수	개
재료	목재, 비닐, 아연, 종이, 플라스틱, 고무 등
크기	면적(m ²), 높이(기본 15m 이하)
설치 기간	일/개월/년(기본단위 1일, 최대 2년)

- 민간업체와 체결한 광고계약의 임대료는 양자 간 합의에 맡기지만, 다운계약서 작성이 의심될 때는 정부의 기준을 참고해 확인

- 모든 옥외광고물은 도시계획, 사회적 윤리, 도시미관, 주변 환경과 조화, 시공 용이성을 우선으로 고려
 - 특히 용도지역지구제 준수를 강조
 - 크기, 시공방법, 표현 등의 디자인적 측면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 인도네시아어로 광고를 작성할 때는 양호한 어휘와 올바른 철자로 된 알파벳을 사용해야 함
 - 외국어는 인도네시아어 아래에 더 작은 크기의 알파벳 글자로 작성
 - 광고를 설치한 기관명과 함께 해당 광고의 설치 유효기간을 읽기 쉽고 명확하게 표기해야 함
- 정부 건물의 옥외광고물 설치 금지, '강력규제지역'에는 단독 설치 불가
 -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청사, 교육기관, 종교기관, 기타 주정부에서 별도로 정한 건물과 토지에는 옥외광고물 설치가 금지
 - 위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최대 5,000만 루피아(400만 원)의 벌금을 부과
 - 시내 주요 간선도로변을 따라 별도로 지정된 '강력규제지역'에는 옥외광고물이 지면 위에 단독 설치될 수 없으며, 건물 외벽에 LED 전광판 형태로 부착해야 함
- 담배광고는 전면 금지, 주류광고는 허가된 장소에만 설치 가능
 - 담배 광고는 2015년 옥외 미디어 담배상품 설치 금지에 관한 주지사 행정령 1호에 따라 자카르타 전체에서 전면 금지
 -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흡연을 따라하는 행위를 유발하는 요소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
 - 기존에 설치된 담배 옥외광고물은 행정령 시행 즉시 흰 천막으로 가려졌으며, 그 수는 전체 옥외광고물 1,708개의 약 30%인 512개에 달함
 - 자카르타 주정부는 유사한 담배광고 옥외광고물 설치 금지 지침을 마련한 다른 9개 도시와 함께 중앙정부 보건부로부터 감사장을 받아
 - 주류광고는 허가된 장소에만 옥외광고물 설치가 가능
- 규제 위반이나 유효기간 만료 시 경고장을 발송하고, 후속조치 없으면 광고물 폐기
 - 옥외광고물 관련 규제를 위반했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갱신하지 않았을 때는 3회에 걸쳐 경고장을 발송
 -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곧바로 해당 광고물의 허가를 취소하고 폐기
 - 2018년 12월 말까지 전체 60개 위반 옥외광고물 중 41개는 광고업체에서 자체적으로, 7개는 주정부에서 취소·폐기 조치를 완료

- 주정부는 2018년 10월부터 중앙정부 부패근절위원회, 자카르타지방경찰청, 자카르타주검찰청과 협력하여 옥외광고물을 지속 규제 중
 - 이는 새로운 옥외광고물 계약 활성화로 이어져 주정부 세수 증대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 2019년 옥외광고물 규제 예산으로 117억 루피아(9억 3천만 원)를 책정

<https://notobaccocommunity.org/10-daerah-pastika-awya-pariwara/>

https://www.hukumonline.com/klinik/detail/lt557b98fceb4fa/hal-yang-boleh-dan-tidak-boleh-dalam-pemasangan-reklame-ibillboard-i#_ftn17

<https://www.hukumonline.com/klinik/detail/lt539faac2d04c3/tarif-pajak-reklame-di-jakarta>

<https://wartakota.tribunnews.com/2018/07/09/melarang-iklan-rokok-dki-jakarta-kota-bogor-kota-bekasi-dapat-apresiasi-dari-menteri-kesehatan?page=2>

<https://marketeers.com/iklan-rokok-dilarang-billboard-kosong-melompong/>

<https://megapolitan.kompas.com/read/2018/12/20/16484721/anies-yakin-penertiban-reklame-dapat-tingkatkan-pendapatan-daerah>

<https://megapolitan.kompas.com/read/2018/12/28/17270091/satpol-pp-targetkan-bongkar-60-reklame-tahun-ini>

<https://www.cermati.com/artikel/pajak-reklame-apa-itu-dan-bagaimana-perhitungannya>

<https://megapolitan.kompas.com/read/2019/01/11/21303421/satpol-pp-dki-anggarkan-rp-117-miliar-untuk-tertibkan-reklame>

광고물 설치에 관한 자카르타 주지사 행정령 2014년 9호

광고물 운영관리 지침에 관한 자카르타 주지사 행정령 2017년 148호

옥외 미디어 담배상품 설치 금지에 관한 자카르타 주지사 행정령 2015년 1호

박재현 통신원, jaehyeon.jay.park@gmail.com

세계도시동향 제447호

발행인 서왕진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19년 1월 21일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개발과 도시 관련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으로부터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센터 출판팀으로 연락 바랍니다.
담당: 정연우(02-2149-1017, cyw797@si.re.kr)

